

4. 적기시정조치 관련

4-1. 적기시정조치 발동 법적·규정 근거

4-2. 금융권역별·단계별 적기시정조치 기준 및 조치(제재)사항

4-3. 적기시정조치 관련 제도개선 및 보완방향

4-1) 적기시정조치 발동 법적·규정 근거

□ 근거법 :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(적기시정조치),
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(경영건전성기준), 여신전문금융업법
제53조의3(건전경영의 지도)

□ 근거규정

-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(경영개선권고), 제35조(경영개선요구),
제36조(경영개선명령), 제37조(적기시정조치의 유예)
- 종합금융업감독규정 제30조(경영개선권고), 제30조의2(경영개선
요구), 제30조의3(경영개선명령), 제30조의4(적기시정조치의 유예)
-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6조(경영개선권고), 제47조(경영개선
요구), 제48조(경영개선명령 등), 제50조(적기시정조치의 유예)
-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의4(경영개선권고), 제20조의5(경영개선
요구), 제20조의6(경영개선명령), 제20조의7(경영상태개조치의 유예)

-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7조(경영개선권고), 제18조(경영개선 요구), 제19조(경영개선명령), 제20조(적기시정조치의 유예)
- 증권업감독규정 제2-32조(경영개선권고), 제2-33조(경영개선요구), 제2-34조(경영개선명령), 제2-35조(적기시정조치의 유예)
-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제31조(경영개선권고), 제32조(경영 개선요구), 제33조(경영개선명령), 제34조(적기시정조치의 유예)
- 선물업감독규정 제28조(경영개선권고), 제29조(경영개선요구), 제30조(경영개선명령), 제31조(적기시정조치의 유예)
- 보험업감독규정 제7-17조(경영개선권고), 제7-18조(경영개선요구), 제7-19조(경영개선명령), 제7-23조(적기시정조치의 유예 · 완화 · 면제)

4-2) 금융권역별 · 단계별 적기시정조치 기준 및 조치(제재)사항

구 분				적기기정조치 종류		
				경영개선권고	경영개선요구	경영개선명령 ¹⁾
조 치 발 동 요 건	자 본 충 실 도	은행 ²⁾	BIS비율	8%미만	6%미만	2%미만
		증권 ³⁾	영업용순 자본비율 ⁴⁾	150%미만	120%미만	100%미만
		보험	지급 여력비율	100%미만	50%미만	0%미만
		저축 은행	BIS비율	5%미만	3%미만	1%미만
		여전	조정자기 자본비율	7%미만	4%미만	1%미만
		신용 카드	조정자기 자본비율	8%미만	6%미만	2%미만
	경 영 실 태 평 가	은행등 ⁵⁾		자본적정성(자산건전성) 부문 4등급 이하	종합등급 4등급 이하	-
		여 전		종합등급 4등급 자본적정성(자산건전성) 부문 3등급 이상	종합등급 4등급 자본적정성(자산건전성) 부문 4등급이하	종합등급 5등급
		신용카드		종합등급 1~3등급 자본적정성(자산건전성) 부문 4또는 5등급	종합등급 4등급 또는 5등급	-
	조치내용 (권역 공통)				조직·인력 운용의 개선,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, 신규업무 진출제한 등	점포폐쇄 및 신설제한, 임원진 교체요구, 영업의 일부정지 등

- 1) 은행, 증권, 보험, 종금, 상호저축은행,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경영개선명령발동시 '자본충실도' 및 '경영실태평가'요건 외에 '부실금융기관지정'요건 포함
- 2) 종금·부동산신탁회사 포함
- 3) 증권회사, 자산운용사, 선물업자 포함
- 4) 증권회사·선물업자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, 자산운용사는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
- 5) 여신전문회사, 선물업자, 부동산신탁회사를 제외하고 각 권역공통

4-3) 적기시정조치 관련 제도개선 및 보완방향

□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권리구제장치 강화차원에서
다음 사항의 제도개선을 추진중('06.8월중 완료예정)

- ① 감독원장이 결정하던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계획 승인에 대해
금감위가 결정하도록 변경

* 비은행(중금, 상호저축은행, 상호금융)권역은 현행유지

- ② 적기시정조치시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,
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사전심의시 당사자의 의견진술
기회를 부여하여 권리구제절차 보완

- ③ 적기시정조치시 비계량평가항목중 중복되거나 불명확한 항목은
정비하고, 주관적 판단가능성이 큰 항목을 삭제하는 등 비계량
평가항목의 객관화·최소화

□ 향후에도 적기시정조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, 금융회사
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권리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인
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